

G-Welfare Weekly Report

2013년 | 발행인(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배수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3층 |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6.12.08.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OECD 가입 20년, 성과와 과제

01 주요 내용

- 12월 12일은 우리나라가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날로 가입 20년을 맞아 경제·사회·국가 위상의 변화와 현재 상황을 짚어봄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정부 간 협력기구로 1961년 9월 30일에 설립되었고, 현재 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립 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한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모색,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함
- OECD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을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있는 (준)기준이 생겼고, OECD가 제공하는 다양한 통계로 현재 상황을 평가할 수 있게 됨
 - 가입 이후 정책 변화는 OECD에서 매년 발간하는 『Going For Growth』와 격년으로 발간되는 『OECD Economic Surveys: Korea(2016)』, 정부부처 자료를 활용*
- 지난 20년간 증가되었거나 개선된 주요 지표는 GDP 규모, 기대수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지출비중 등임
 - 국내총생산(GDP)은 1996년 6,568억 달러이던 것이 2016년 17,488억 달러로 약 2.7배 성장하였고,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
 -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대수명은 늘고 영아 사망률은 감소하는 등 건강수준이 개선됨
 -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은 1996년 3.6%에서 2013년 6.9%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OECD의 2013년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
 - 기대수명은 1996년 77.9세에서 2016년 82.1세로 20년 새 4.2세가 높아졌고, 영아 사망률은 1996년 1000명당 7명에서 2015년 2.7명으로 4.3명으로 감소하는 등 OECD국가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수준
 - 영아사망률의 감소는 산모와 영아의 사회경제적 여건, 사회 환경, 개인의 생활 스타일, 의료 시스템 등의 전반적인 개선을 의미
 - 사회복지지출(social spending) 비중은 1996년 3.23%에서 2016년 10.4%로 222%가 증가하는 비약적 성과가 있었으나,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며 멕시코·칠레와 더불어 최하위 수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평가 및 과제 참고

지표	1996	2004	2016	비교(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656,843백만 달러	1,103,360백만 달러	1,748,777백만 달러	1,505,468백만 달러
기대수명	77.9세	81.8세	82.1세	79.9세(2013)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7.7명	4.1명(2006년)	3명(2013)	4명(2013)
사회복지지출비중(GDP 대비)	3.23%	5.72%	10.4%	21.0%
보건지출(GDP 대비)	3.6%	5%	6.9%(2013)	8.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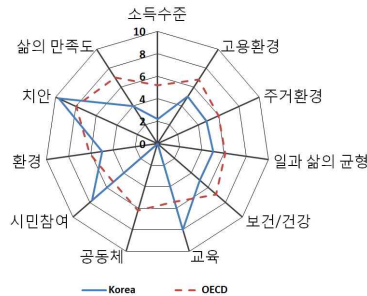
주 : GDP의 OECD 평균은 OECD total을 34개국으로 나눈 값임
 자료 : <https://data.oecd.org/>

- 출산율이나 저축률 등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근로시간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빈곤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정체 상태
 - 우리나라 저축률은 1996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OECD 회원국 중 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해옴
 - 출산율은 2015년 1.25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고, 감소폭도 가장 크며, 이로 인한 고령화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저출산 및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 1996년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2,637시간)은 OECD의 1.41배 수준에서 2015년에는 2,113시간으로 524시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근로 시간을 유지
 - 지난 20년간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28.7명으로 1996년 15.2명에 비해 2배 증가하였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높은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률은 1996년 9.1%에서 2014년 16.4%로 80% 증가하였고, OECD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한국 노인층 빈곤률은 2014년 현재 48.6%로 전체 빈곤률의 약 세 배 정도 높는데, OECD 국가가 전체 빈곤율과 노인층 빈곤율이 비슷한 것과 대조적

지표	1996	2004	2016	비교(OECD 평균)
1인당 근무시간	2,637시간	2,392시간	2,113시간(2015)	1,765시간
저축률	21%	17.5%	15.8%	21.4%(2013)
출산율	1.6명	1.1명	1.2명(2015)	1.68명(2014)
상대빈곤율	9.1%	11.1%	16.4%(2014)	11.2%(2013)
자살률(인구 10만명당)	15.2 명	29.5 명	28.7 명(2013)	12명(2013)

주 1 : 상대빈곤율은 1996년과 2004년은 빈곤통계연보(20006)
 주 2 : OECD평균 중 저축률은 코리아헤럴드(2016.3.4.), 자살률은 세계일보(2016.2.2.)
 자료 : <http://data.oecd.org/>

- 20년이 지난 2016년 현재 삶의 질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치안, 교육, 시민참여 등은 높은 수치를 보이나 사회관계, 일과 삶의 균형, 보건/건강 부분에서는 취약
 -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를 기록
 - 2012년에는 24위였으나 2013년 27위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28위
 - 일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기준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은 23.1%로 OECD평균(13%)보다 10%p 높음



자료 : OECD Economic Surveys: Korea(2016)

02 경기도 시사점

-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취약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 향후 20년이 되어야 할 것임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근무환경 마련,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OECD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제도의 실행과 확산
 - 사회 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경기도의 인구나 면적, 경제 규모 등은 단위국가 수준이 되는 만큼 경제·사회적 준거 기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경기도의 경제·사회 수준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매년 도정 계획 수립 시 반영

2. 400조 슈퍼예산 통과... 복지예산 비중은 32.3%

01 주요 내용

- 지난 3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정부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확정*
 -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7%(14조1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 지출규모 대비 1.3% 늘어난 규모임
 - 당초 정부안(400.7조)보다 2천억 원 삭감된 규모이나, '01년 100조원 → '05년 200조원 → '11년 300조원에 이어 내년부터 '400조원 슈퍼예산 시대'에 돌입
- 분야별 예산비중은 보건·복지·고용이 32.3%로 가장 크고, 일반·지방행정(15.8%), 교육(14.3%), 국방(10.1%) 순으로 나타남
 - 12개 세부분야 중 3개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소하였는데**, 특히 보건·복지·고용예산의 감액은 10년 만에 발생한 현상
 - 주요 감액분은 ①실업급여('쉬운 해고'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했던 예산이 법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감액)와 ②국민연금 지출액(실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감액)가 해당

*내년도 총지출 규모(예산+기금) 기준 예산임

**일반행정(△6천억), 보건복지고용(△5천억), 문화체육관광(△2천억)

〈표〉 정부 복지예산 규모 및 비중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예산	257.1	284.5	292.8	309	325.4	341.9	355.8	375.4	386.4	400.5
복지분야	61.7	67.8	73.9	78.9	84.8	88.7	97.2	115.7	123.4	129.5
비중	(24.0)	(23.8)	(25.2)	(25.5)	(26.1)	(25.9)	(27.3)	(30.8)	(31.9)	(32.3)

(단위: 조원, %)

- 내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총 예산은 129.5조 원으로 올해 대비 6.1조 원이 증가
 - 예산규모는 지난 '08년 61.7조에서 '17년 129.5조로 9년 간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예산비중도 같은 기간 24%에서 32.2%로 8.2%p 증가
 -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회가 증액한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와 긴급복지 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등임
- 보건복지부 배정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8,436억 원) 대비 1조8,192억 원(3.3%) 증가한 57조 6,628억 원으로 확정
 - 생계급여(511억), 긴급복지(100억), 의료급여(524억) 등 취약계층 생활보장 사업이 복지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고, 그 외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이 증가하였음

〈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증감 현황

구분		16년 본예산	정부안	국회 확정	증감 사유
기초생활	긴급복지	101,304	101,304	111,304	16년도 추경수준 증액
	생계급여	3,272,839	3,619,132	3,670,232	조정계수 조정
	의료급여 경상보조	4,722,421	4,746,764	4,799,164	16년 예상 미지급금 반영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500,890	516,486	546,137	활동보조인 확대(2천명), 단가인상(9,000→9,240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70,725	67,556	81,365	직접일자리 +1,525개
	장애인연금	548,257	554,967	559,967	17년 부족 예상액 반영
	장애수당(기초)	69,500	73,602	78,102	17년 부족 예상액 반영
연금	장애인 의료비지원	23,981	21,583	27,575	4년 평균 청구액 반영
	국민연금 급여지급	18,548,797	19,904,300	19,499,700	노령연금 지급인원 조정

(단위: 백만원)

02 경기도 시사점

-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증가한 만큼 향후 매칭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조정에 대한 對 중앙정부 대응전략 마련
 - 증가하는 매칭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의 합리적 배분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고, 도비와 시군비의 사업별 보조율 편차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전국 지자체별 인권조례 제정 현황

68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알아보고자 인권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비교

- 지난 1948년 12월 10일은 제3회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로, UN 회원국들은 정부 주관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만연했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모든 사람과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할 새로운 기준-"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관해 평등하다"-을 세우기 위해 채택한 선언*
 - 당시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선언의 보급에 관해 결의하고, 12월 10일을 세계인권의 날로 제정
-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신문고·경찰청 인권센터 등 인권 전담기구 운영 등이 있음
 -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인권조례 제정, 전담기구 설치,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진행 등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책을 추진
 - (광주)세계인권도시 지정, (서울)인권 전담부서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 서울시인권위원회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등 지방정부 인권행정을 선도
-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은 2010년대 들어 시작되었으며, '16년 현재 17개 시도를 포함한 148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임
 - 현재 시행 중인 인권조례는 총 231개에 이르며, 인권조례의 종류는 포괄적 성격의 기본조례와 장애인, 여성, 이주민, 학생, 아동청소년 등 개별 인권조례로 구분
 - 대상별로 장애인(115)·모든 주민(93)·아동청소년(12)·외국인(7)·노동(2)·여성(1)·노인(1) 순임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문이었으나, 유엔 총회에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현재는 법적 효력을 가짐

〈표〉 전국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

	전국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강원
합 계	231	45	32	9	5	21	12	2	7
광역	43	4	1	2	1	2	4	2	3
기초	188	41	31	7	4	19	8	-	4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합 계	17	11	17	6	12	5	9	17	4
광역	4	3	3	2	2	2	1	3	4
기초	13	8	14	4	10	3	8	14	-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노동인권 등 총 네 가지 인권조례가 시행 중임
 - 조례에는 인권정책 계획 수립,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
 - 자치단체에 따라 인권지표(지수)의 개발 운영,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인권전담부서 설치, 인권침해 시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도 존재
- 도내 시군 중 김포(청소년), 부천(아동청소년), 성남(청소년노동), 안산(노동·외국인주민)은 특정계층에 대한 개별 인권조례를 제정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2016 제4차 복지 콜로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6. 12. 20.(화) 14:00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허브2실 • 주 제 : 한국 사회복지의 개척자들(근대사회를 중심으로) • 발 제 : 김범수 회장(한국사회복지역사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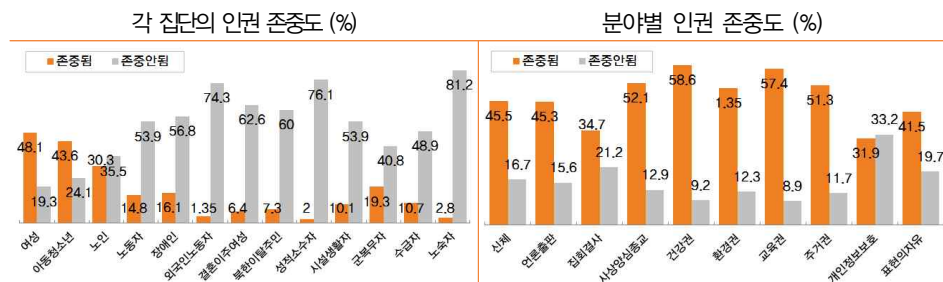
03 FACT CHECK

사회복지에서의 인권,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중요하다?

-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하며, 자유권에는 존엄성과 자기결정 및 차별금지, 시민정치적 권리를, 사회권은 경제사회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를 다루고 있음
- 사회복지의 추상적인 차원의 인권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특히 인권의 사회권(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임
- 그러나 사회복지의 인권의 사회권에만 한정하면 복지가 자기결정권 등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복지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만 집중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단 사회구성원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 공동의 힘으로 그들의 삶을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조체계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존재 목적이 곧 인권보장이자 할 수 있음
- 따라서 인권기반의 사회복지의 미시적·실천적 차원이 아닌, 인권의 기본 가치에 바탕을 둔 국가와 사회의 노력 및 그 결과로서의 사회복지라는 큰 관점을 가져야 함
 - 복지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이루어져야하며, 복지대상자를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선택권과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 정책의 시행평가에 있어 인권의 기본원칙이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04 통계로 보는 복지

우리나라 인권 통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1),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 결과, 인권이 '존중 된다'고 보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 아동청소년 > 노인 등과 같이 특정 성·연령 등 인구학적 집단임
 - 반면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 > 노숙자 > 시설생활자, 성소수자 등으로, 이들의 인권존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인권 존중도에서 가장 존중되지 않는 분야는 개인정보의 보호이며, 다음으로는 집회·결사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순임
 - 이는 최근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